

실직자 자녀 교육비 지원 본격화

군산 산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따라... 도교육청, 군산교육지원청에 전담창구·전담인력 배치

정부는 지난 5일 현대중공업 조선소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공장 폐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GM 군산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군산교육지원청에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실직자 자녀 교육비 지원 전담창구는 지난 1일부터 전담인력이 배치돼 운영에 들어갔으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실직자 자녀들이 교육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군산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사회복지사협회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산 외에도 GM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소재한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5개 지역교육지원청에도 각각 담당자를 지정,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 내에도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지정돼 실직 근로자 자녀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실직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자녀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실직자 자녀 ▲인근 요식업·숙박업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녀 등이다.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총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도교육청은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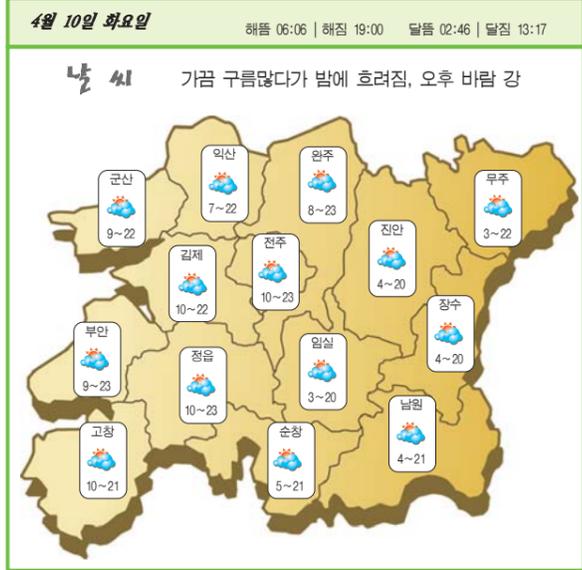
학교의 교육복지사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빈곤 사각지대의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군산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학교, 기능경기대회 최우수” 제48회 전북기능경기대회가 익산 전북기계공고와 전주공고에서 열렸다. 기능경기대회 마지막 날인 9일 전북기계공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북기계공고는 작년 이어 올해도 폴리메카닉스의 6종목에 참가해 전 종목에서 금, 은, 동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교육청은 이들 실직자 자녀에게 수업료(고교, 1분기 31만8,000원), 학교운영지원비(고교, 1분기 5만4,000원 안팎), 수학여행비(초·중·고·특, 최고 13만원), 교복구입비(중·고, 최고 22만원), 방과후교육비(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은 해당금액을 면제하거나 감면 후 보조, 환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도교육청은 실직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에 올해 총 42억7,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내년까지 89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기자



“학생인권보호, 권리 확장까지 고민해야”

천호성 도교육감 예비후보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사진)는 현재 교육에 대해 “사회는 민주화되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세상을 향해 투쟁하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변화의 흐름이 더디고 좋은 대학이라는 명분하에 사회와 교사·학부모가 때로는 한몸이 되어 학생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난 6일 지적했다.

이에 천 예비후보는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학생도 인간이고 존엄성이 있으며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며

배우는 것이고 그 배움의 방법은 인간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최근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김승환 교육감 시절의 학생인권보호 정책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일에 대해 학교인권을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적 시각으로 편협하게 생각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고 지적했다.

“학생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었던 기술어진 운동장에 수평을 맞추려는 노력은 더 지속돼야 한다”고 했고 또 “학생인권보호는 수위를 조절할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보장을 넘어 권리의 확장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청소년 참정권 확대운동과 관련 “그 운동의 중심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김승환 “교직원 소송엔 법률적 지원 검토”

앞으로 교직원들이 공무 관련 소송에 휘말렸을 때 법률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9일 열린 확대간담회에서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공무 수행 중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민에게 손해나 손실을 끼쳤을 경우 고소·고발이나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홀로 대응을 한다”면서 “하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단지 경과실일 경우에는 도 교육청이 법률지원 등 지원을 해주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단 경과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즉 선출직 기관장이 하는 걸로 판단 받을 여지도 있는 만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공공구매로 우수 중소기업 판로확보 돕는다

전주시,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설명회... 올해 지역제품 공공구매 200억 목표

전주시가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늘려 기를 살리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00억원 상당의 지역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구매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구매 활성화는 지역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시는 시 산하기관 뿐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공공기관까지 우선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제품의 지역 내 소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힘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구매 대상인 우수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을 동행 방문해 제품 홍보에 나

서고, 기관장 회의 등 각종 간담회를 통해 지역 제품을 홍보하고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호텔 등 대형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도 지역기업과 연계해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제품 전시·판매 홍보관 설립을 위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어린이집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 등 다양한 단체를 대상으로도 지역제품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시 산하 구매 및 계약 담당자, 주요 사업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제품 전시·설명회에서는 우선구매 대상인 루미컴(주) 등 우수중소

기업 15개 업체가 참여 하였으며 미동체어의 사무용 의자와 루미컴(주)의 감박임 없이 편안한 빛 플리커프리 LED조명, 인에코(주)의 향기나는 타일 등 친환경 건축자재, ㈜이엔이의 아연이온수 공급장치, 아토피 방지에 탁월한 ㈜나비스의 편백캡슐이불솜, ㈜수테크놀로지의 변기 탈취 시스템 ‘에티쉬’ 등 우수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참여업체들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PPT 발표를 통해 제품을 직접 홍보하면서 생산제품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높이기도 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은 “지역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단초가 되며, 공공구매 담당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 ‘시민인문세미나’ 17일 개강

전주시가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장인 시민인문세미나를 개최한다.

시는 오는 17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전주시평생학습관, 인문공간 파사주, 두권책방에서 시민인문세미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인문세미나는 철학서적에 인문매개자의 강독으로 기본 개념을 익히고 토론을 통해 서로 배우는 집단지성의 장이다.

시민인문세미나는 서양철학 세미나 3개와 동양철학 세미나 2개,

기획세미나 등 총 6개 주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청년인문학세미나 시간에는 ‘청년세미나-불확실성의 시대에 개인으로 살아남기’를 주제로 청년들과 미셀푸코의 ‘주체의 해석학’을 함께 공부하게 된다.

이번 시민인문세미나는 기본 11회씩 운영되며,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onju.go.kr) 또는 전화(063-281-5367)로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